

2015

연구보고서-26

I S S U E P A P E R

젠더·세대·계층별 가족변화와 정책수요를 기반으로 한 가족정책


수행과제명 · 가족변화 대응 가족정책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 연구


과제책임자 · 홍승아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젠더·세대·계층별 가족변화와 정책수요를 기반으로 한 가족정책*

수행과제명  가족변화 대응 가족정책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 연구

과제책임자  홍승아 연구위원

 Tel: 02-3156-7149

 e-mail: hongsa@kwidimail.re.kr

I 요약

가족의 구성과 유지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서 전통적인 가족 외 1인가구, 재혼가구, 한부모가구 등의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가족의 변화는 가족구성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젠더·세대·계층별로 각각 다르게 경험되고 있다. 따라서 가족의 변화를 젠더·세대·계층별로 분석하여 이들의 각각의 욕구에 맞는 다각적인 차원에서의 가족정책의 방향 설정과 정책과제 추진이 필요하다.

* 이 이슈페이퍼는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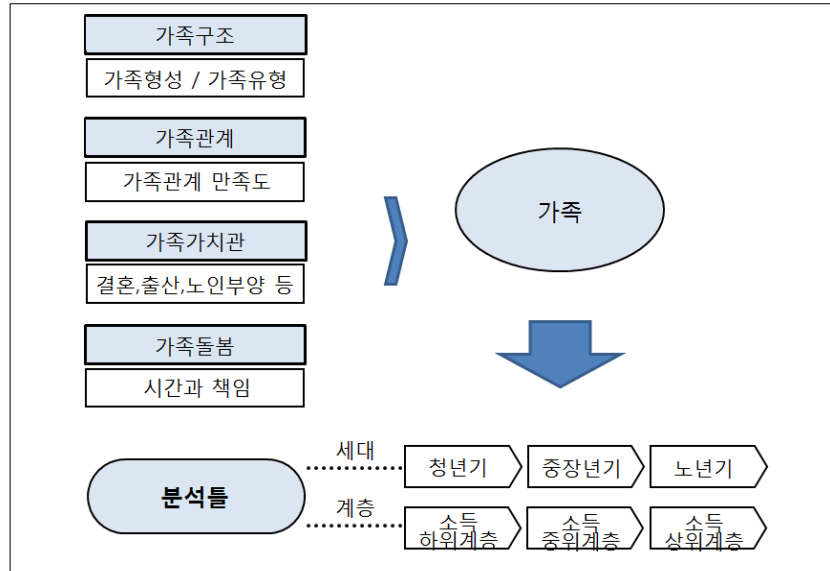
홍승아·최진희·진미정·진수진(2015). 가족변화 대응 가족정책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 배경 및 문제점

- 우리나라는 2001년 여성부의 설립과 2005년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으로 명시적인 가족정책이 시작되었고 그동안 다양한 가족정책과 가족지원서비스가 추진되어 왔다. 이같이 가족정책의 발달과 확장이 진행되고 있지만, 동시에 가족과 가족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족정책의 목표와 방향성에 대해서도 새로운 전환과 변화가 필요하다.
- 한편, 국외적으로도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출산율 감소, 무자녀 가구의 증가, 결혼율의 감소와 이혼율의 증가, 비전통적인 파트너십(동거 등)의 증가, 사실혼관계의 출산의 증가, 한부모가족과 재혼가족의 증가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사회변화와 함께 나타날 다양한 가족변화에 대한 진단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OECD, 2011: 23-29).
- 본 연구의 목적은 젠더·세대·계층 축을 중심으로 가족의 변화를 분석하고, 변화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정책수요를 파악하여, 가족정책 목표와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2 조사 및 분석결과 : 젠더·세대·계층별 가족변화와 정책수요

-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사회조사, 생활시간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조사,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등의 자료를 재분석하여 최근의 가족변화를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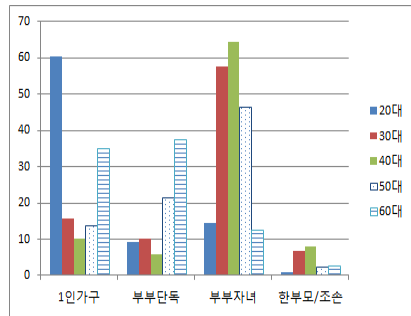
[그림 1] 가족변화의 분석틀

1) 가족변화

■ 가족구조, 가족관계, 가족가치관, 가족돌봄 네 가지 영역을 통해본 가족의 변화는 모든 영역에서 현저히 나타났지만 그 정도는 젠더·세대·소득계층에 따라 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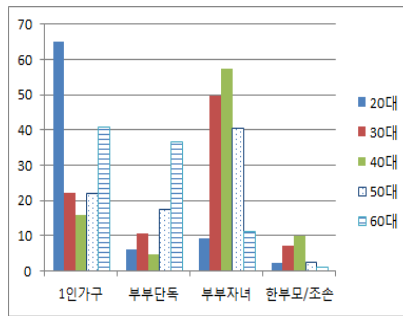
■ **가족구조** 측면에서 보면, 결혼지위, 가족유형, 가구원수, 출생자녀수 등에서 남성, 여성 모두 미혼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남성의 경우 30대와 40대에서의 증가폭이 크다. 세대별로는 전연령대에서 1인가구의 증가가 주목할만한 점이며, 이 가운데 40대 남성의 증가폭이 크다. 평균가구원수 역시 전연령대에서 감소하였다. 소득계층별로는 소득 하위집단에서는 1인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고, 평균 가구원수 역시 소득 하위집단에서 가장 작고, 소득 상위집단에서 가장 많다. 결과적으로 결혼관계의 변화, 가족유형의 변화는 남성, 30대와 40대, 소득 하위집단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소득 상위집단에서는 큰 변화

가 감지되지 않았는데 이는 가족구조의 안정성이 유지되는 반면 하위 계층에서는 불안정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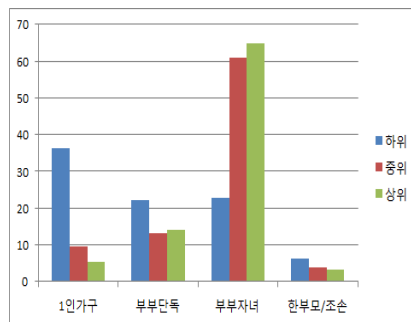
통계청(2008). 사회조사

[그림 2] 연령별 가구유형(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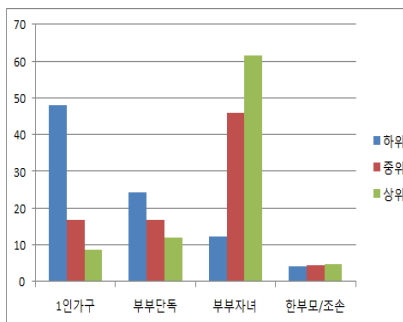
통계청(2014). 사회조사

[그림 3] 연령별 가구유형(2014)



자료: 통계청(2008). 사회조사

[그림 4] 소득계층별 가구유형(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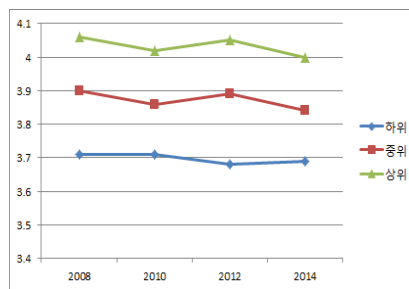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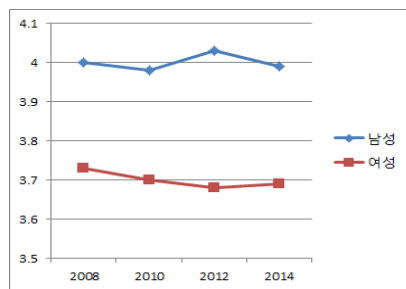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4). 사회조사

[그림 5] 소득계층별 가구유형(2014)

■ **가족관계**의 만족도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 등 6가지 만족도에서 일관된 경향이 나타났다. 세대별로는 20대와 30대의 가족관계 만족도가 전 영역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50대, 60대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모두 낮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형제자매와의 만족도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남성의

만족도가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배우자 부모님과 가족관계 만족도에서는 여성의 만족도가 크게 낮았다. 소득계층 간 차이 역시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모든 영역에서 소득 상위계층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중위계층, 하위계층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소득 계층별 차이는 크고, 변화 추이는 거의 없어 세대, 계층 간의 차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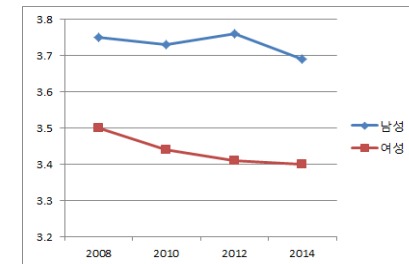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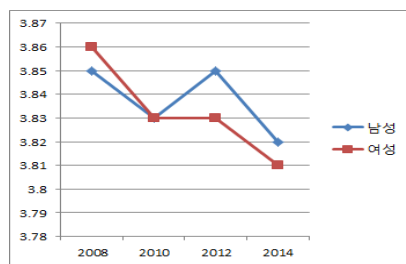


주: 5점에 가까울수록 만족도가 높음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해당연도

주: 5점에 가까울수록 만족도가 높음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해당연도

[그림 6] 성별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2008, 2010, 2012, 2014)

[그림 7] 소득계층별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2008, 2010, 2012,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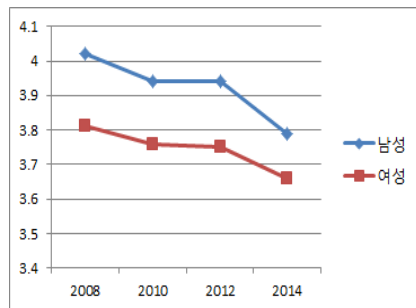
주: 5점에 가까울수록 만족도가 높음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해당연도

주: 5점에 가까울수록 만족도가 높음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해당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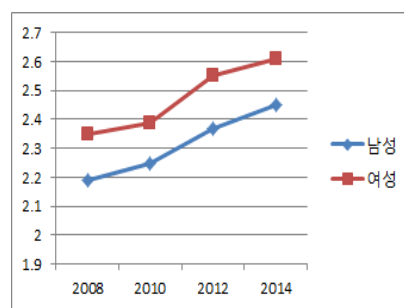
[그림 8] 성별 부모님과의 관계 만족도 (2008, 2010, 2012, 2014)

[그림 9] 성별 배우자 부모님과의 관계 만족도 (2008, 2010, 2012, 2014)

■ **가족가치관** 측면에서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결혼, 재혼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감소하였고, 이혼, 동거, 사실혼관계의 출산에 대한 허용적 태도는 전연령대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와 30대에서의 증가폭이 크다. 전 연령대에서 결혼당위성에 대한 동의도는 감소하고, 가족관계보다는 당사자 중심의 결혼생활에 대한 동의도는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가족구성과 관련해서도 사실혼관계에서의 출산 항목을 제외한 재혼, 이혼, 동거, 국제결혼 등의 항목에서는 전연령대에서 허용도가 증가하였다. 부부간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태도는 남성과 여성 모두 반대 의견이 증가하였다. 소득계층별로는 40대 연령층을 기준으로 볼 때 결혼의 당위성, 재혼, 국제결혼에 대한 태도는 소득 상위집단에서 보다 허용적이고, 이혼, 동거, 사실혼관계의 출산에 대한 태도에서는 소득 하위집단의 허용성이 더 높았다. 개인보다 가족관계 중심의 결혼생활에 대한 동의도와 노부모의 생계비를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모두 소득 하위집단에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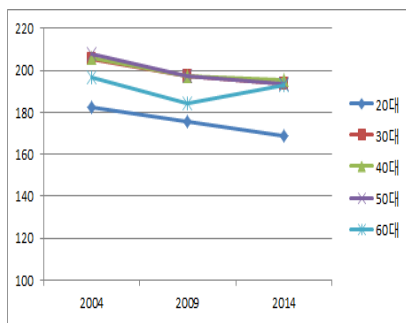
주: 5점에 가까울수록 동의도가 높음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해당연도



주: 4점에 가까울수록 동의도가 높음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해당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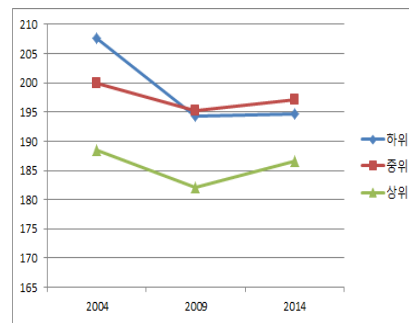
[그림 10] 성별 결혼의 당위성에 대한 태도 추이 (2008, 2010, 2012, 2014) [그림 11] 성별 이혼에 대한 태도 변화 추이 (2008, 2010, 2012, 2014)

■ 마지막으로 **가족돌봄** 영역에서는 시간의 양이나 돌봄참여 영역 모두에서 현격한 성별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격차는 시간변화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시간을 성별로 비교해 보면 가사노동 1일 평균시간은 여성이 192.97시간, 남성이 42.79시간으로 여성이 4.5배 많고, 자녀돌봄 시간 역시 여성이 181.99시간, 남성 53.21시간으로 역시 여성이 3.4배 많다¹⁾. 다만 2009~2012년 동안 변화는 나타나고 있다.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시간은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미미하게 증가하였고, 60대에서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소득 하위집단 남성의 가사노동시간과 돌봄시간이 크게 증가하였다.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해당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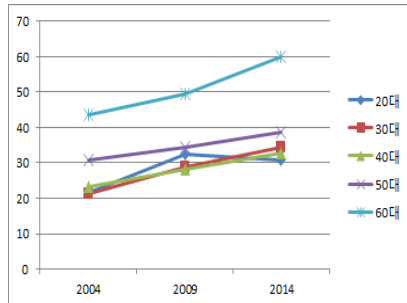
[그림 12] 기혼여성의 연령별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 (2004, 2009,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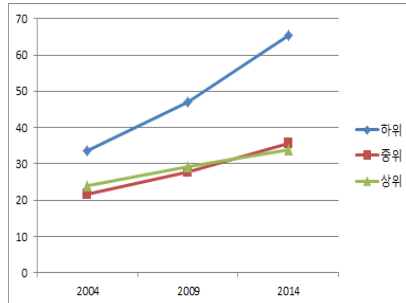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해당연도

[그림 13] 기혼여성의 소득계층별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 (2004, 2009, 2014)

1) 소득 상위집단 여성의 가사노동시간과 돌봄 시간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일관되게 가장 적었다.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해당연도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해당연도

[그림 14] 기혼남성의 연령별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 (2004, 2009, 2014) [그림 15] 기혼남성의 가구소득별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 (2004, 2009, 2014)

2) 가족변화에 따른 정책수요

■ 첫째, 가족구조 측면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미혼율이 증가하고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계층별 가족구조의 변화 역시 중요하게 나타나므로 이에 대응하여 가족정책은 다변화된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다각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1인가구를 비롯하여 전통적인 가족구성 외 새로운 가족구성 및 가족생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 미래 가족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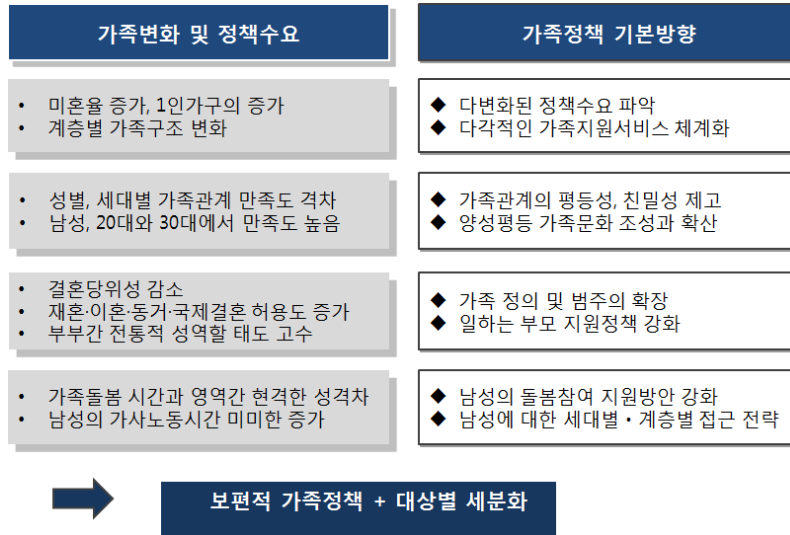
■ 둘째, 성별, 세대별 가족관계 만족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남성과 여성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소통과 역할, 책임의 분담 등에서의 가족내 다양한 역학관계(dynamics)를 표출하는 것이므로 원만한 가족관계를 증진할 수 있도록 이에 대응하여 성간, 세대간의 평등성, 친밀성을 제고하는 노력과 양성평등 가족문화의 조성확산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방향이다.

■ 셋째, 분석한 네 가지 영역 중 가족구조, 가족관계, 가족가치관 측면

에서는 변화가 뚜렷이 진행되고 있는 반면 가족돌봄의 영역에서는 여전히 변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여전히 남성과 여성의 시간과 참여 영역에서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변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정책추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어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동시에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보면 남성의 육아참여나 가사동시간이 증가한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이에 남성이 보다 적극적으로 육아 및 가족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고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양립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 넷째, 중장년층의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가족변화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가장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세대로 대변되는 중장년층에서 급격한 가족변화에 상당부분 동의하는 태도와 보수적인 태도의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가족구성이나 가족생활의 유지에 있어서도 중장년층 남성들은 가족생활에서 소외될 수 있는 위험성이 충분히 있고 이러한 위험이 지속될 경우 노인생활의 불안정성까지 연결될 수 있으므로(최인희외, 2014) 이들에 대한 정책개입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 마지막으로, 가족유형에 관계없이 가족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중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득지원 정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특히 앞서 살펴본 OECD 국가 비교자료 중 우리나라는 소득이전 부문에서의 지원이 매우 낮다. 특히 유자녀가족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저소득층과 중위계층까지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그림 16] 가족변화 및 정책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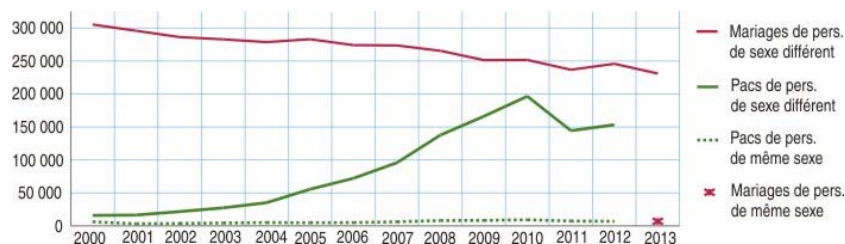
3) 외국의 가족변화와 가족정책 최근 동향

■ 가족정책 유형화를 통해서 살펴본 점은 우리나라는 ‘제한적인 가족지원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휴직기간을 길지만 남성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제도적 장치(부성휴가나 남성 할당 기간 등)가 없다는 점과²⁾ 제도이용의 자격을 정규직 노동자들만이 갖는다는 점, 그리고 현금이전의 규모가 매우 작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지원국가로 분류되고 있다(Thévenon, 2011: 70-71). 따라서 남성의 육아 및 가족생활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다 강화하고 제도이용의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 프랑스는 가족의 변화와 함께 전통적인 가족형태의 틀을 벗어난 가족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시민연대협약’(Pacte

2) 우리나라에 부성휴가제도(paternal leave)는 2008년 배우자출산휴가제도의 명칭으로 도입되었으나 연구자의 분석자료에서는 시차가 있어서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됨.

civil de la solidarité, PACS) 도입을 계기로 한 가족의 구성과 해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정부정책 역시 변화된 가족양상에 맞추어 정책대상을 확대하고 수요에 필요한 정책으로 변화되고 있다.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부모의 노동시간에 기반한 제도설계에 기반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최근 남성의 육아 참여를 위하여 “남성육아휴직 쿼터제”(Préparée)를 도입하였으며, 시간제 노동의 축소,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6개월 간의 보너스 기간³⁾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하였다⁴⁾. 특히 2014년 도입된 「남성과 여성 간 실질적인 평등을 위한 법」(La loi pour l'égalité réelle entre les femmes et les hommes)도 이러한 변화와 실천에 있어서 중요한 추진기반을 제공하였다.



주: 빨간색은 이성 간의 결혼, 초록색은 이성 간의 시민연대협약, 점선은 동성 간의 시민연대협약 건수를 보여줌. x는 동성 간의 결혼을 나타냄.

자료: Bellamy, Vanessa. et Beaumel, Catherine. (2014). p. 3. 유은경(2015b). p. 10에서 재인용

[그림 17] 프랑스의 결혼과 시민연대협약(PACS)의 변화(2000-2013)

■ 호주는 2013년 현재 합계출산율 1.88명으로(OECD Family Database) 저출산의 위험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에 있다. 가족형태에 있어서 부부관계의 안정성이 약화되면서 가족에 대한 정의를 ‘혈연, 혼인

3) 이 6개월은 사용않으면 자동적으로 자격을 상실하게 하는(use it or lose it) 제도로 도입되었다.

4) 이러한 제도의 도입과정에서 여성권리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

(법률혼과 사실혼 모두 포함), 입양, 재구성, 위탁 등으로 2명 이상이 모인 집단 혹은 1명 이상'(Weston & Qu, 2014: 10)으로 확대하고 있다. 호주의 가족정책은 주로 경제적 지원 방식에 주력하고 있어서 가족세 제공여와 보육비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보육비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기준 방식을 가족의 소득만이 아니라 부모의 취업, 훈련, 학업 테스트(work, training, study test)를 병행하여 서비스 수요욕구를 면밀히 조사하여 차등적인 지원을 제공한다(1주 24시간, 취업부모 50시간까지 지원). 호주에서도 2013년 아버지/파트너 휴가제도(Dad/Partner Pay)를 도입하여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배우자,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2주간 양도할 수 없는 휴가기간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다(Pocock, et al., 2013: 600, Broomhill and Sharp, 2012: 9)⁵⁾.

■ 프랑스나 호주의 사례는 저출산의 위협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위치에 있으며, 여기에 대한 주요한 요인은 두 국가가 전통적 가족형태에서 가족형태를 개방, 확대하였고, 사실혼관계에서의 출산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가 출산율 감소라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유자녀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자녀양육에 대한 가족의 부담을 완화시켜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3 정책제언

제안 1) 유자녀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가족정책 중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유자녀가족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특히 국가가 개입하는 유자녀가족 지원정책은 경제적인 지원

5) 역시 이 제도도 “사용 않으면 상실”(use it or lose it) 제도를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다.

을 통하여 유자녀가족과 무자녀가족 간의 양육부담 차이를 완화하는 것이다.

- 자녀양육 관련 세제지원 강화
- 지역사회 기반 돌봄공간 및 돌봄공동체 확산
- 양육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제안 2) 일가정양립 지원 강화

맞벌이가족이 보편적인 가족형태로 자리잡아 나가면서 가족정책의 중요한 목표는 자녀양육과 부모의 일가정양립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에서도 일하는 부모(working parents)가 증가하면서 일하는 부모를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와 조직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맞벌이가족 지원정책은 노동정책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여성고용 후속대책으로 “일하는 부모”를 집중적인 대상으로 한 정부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4). 이와 같이 일하는 부모를 주요 타겟으로 하는 가족정책과 노동정책이 유기적으로 수립·추진되어야 한다.

- 맞벌이가족 자녀의 보육서비스 우선이용권 강화
- “가족책임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강화와 차별금지 근거규정 마련
- “가족시간” 확보를 위한 캠페인 확대
- 가족을 중시하는 사회문화 조성

제안 3) 양성평등 가족문화의 조성과 확산

남성 중심적이고 결혼관계에 기반하여 위계적인 젠더 질서(gender order)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에서 성평등한 부모관계와 부부관계, 보다 많은 선택이 가능하고 결혼의 다양한 방식과 탈개인화의 가족으로 변화하여야 한다.

-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가족, 사회, 기업의 변화

- “아빠 육아”(가칭) 홈페이지 개설
- “아빠 육아” 지원기업 사례발굴 및 홍보
- “찾아가는 아버지교육”을 가족친화인증제도와 연계

제안 4) 대안적 가족형태 및 새로운 가족생활에 대한 대응정책 개발

1인가구의 증가, 젠더·세대간 가족갈등과 위기, 고령화 사회 노인가구의 증가, 저소득가족의 가족생활 안정성, 가족구성에 대한 다양한 변화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선제적 가족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인가구의 다양성과 육구증대에 대한 적극적 대응정책 개발
- 가족주기별 가족관계 교육 강화
- 노인가구의 가족생활 지원
- 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폐지
- 가족구성에 대한 개방적 태도와 대안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논의 시작

4 기대효과

가족변화에 대한 젠더·세대·계층별 변화특성과 정책수요 분석을 통하여 가족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양성평등 가족정책 및 가족문화 정립에 기여.

참고자료



- 정경희·남상호·정은지·이지혜·이윤경·김정석·김혜영·진미정(2012). 「가족 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현숙(2015). “가족의 변화와 가족의 세대간 갈등과 차이”. 제1차 KWDI 가족 포럼 발표자료.
- Blome, A. (2011). “Work/Care Policies in European Welfare States: Continuing variety or change towards a common model?.” WZB Discussion Paper. SP I 2011-401.
- Thévenon, O. (2011). “Family Policies in OECD Countries: A comparative analysi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7(1): 57-87.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관계부처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